



보 도 자 료

- ▷ 보도일: 2010.8.17(화) ▷ 자료배포 <http://tongil.snu.ac.kr>
- ▷ 문의: 02) 880-4052~4, 880-9042, tongil@snu.ac.kr
- ▷ 연구 책임: 박명규 소장 ▷ 자료 작성: 정은미 선임연구원

■ ‘이중적’ 국민의식의 흐름에 대응하는 통일방안 준비 시급

…통일의 필요성과 기대감은 높아지는 반면, 현실주의적 접근태도 뚜렷

- ‘통일이 필요하다’ 59%, 2008년 이후 가장 높음
- ‘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’ 53.5%, 2008년 이후 가장 높으나 ‘나에게 이익이 된다’는 응답은 24%에 그침
- 통일의 이유로 ‘같은 민족이니까’는 하락세, ‘전쟁위협 해소’와 ‘선진국 되기 위해’는 상승세
- 통일 가능 시기 ‘30년 이상’이거나 ‘불가능’이라는 응답층 크게 증가-41.4%에 달함

■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, 하지만 남한정부에 대해서는 화해협력력을 요구

- 북한의 인권개선(82.8%), 개방과 개혁(78.2%),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(75.7%)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 커짐
- 북한에 대한 경계심, 불신도도 지속적으로 증대
- 금강산관광·개성공단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 68.6%, 2008년 이후 가장 높음
- 정기적인 남북대화가 통일에 기여한다는 응답 75.3%, 2008년 이후 가장 높음

■ 위기감이 커지는 만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함

-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‘군사적 긴장 해소’ 83.6%
- 북한의 무력 도발가능성, 전쟁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

- 안보를 중시하지만 동시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절대적으로 원함

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, 신뢰도 모두 매우 낮음

-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‘만족한다’ 39.5%, ‘불만족한다’ 60.5%
-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‘잘 반영하고 있다’ 28%, ‘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’ 72%

■ 이상의 국민통일의식을 근거로 볼 때 8.15구상이 힘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임

1) 통일의 ‘과정’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필요

- 통일론을 정서적, 당위적 차원에서가 아닌, 냉정하고 치밀한 정책과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
- 통일에 필요한 재정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통일비용의 규모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
- 실질적으로 나타날 어려움, 국제사회 및 북한의 반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고려 필요

2) 양면성, 이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 정책이 필요

- 북한과의 대화, 교류협력, 신뢰구축 방안이 통일논의와 병행되어야
-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한 일방적, 이념적, 정파적 통일론은 피해야
- 평화공동체, 경제공동체, 민족공동체를 단계적으로 사고하기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각각의 과제로 고려할 필요

3)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절실

- 신(新) 3단계 통일방안, 통일세 도입 등도 충분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
-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도를 완화하려는 노력 필요
- 정책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은 절실

○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8.15경축사 발표 후 통일논의에 대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 최근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 결과의 일부를 발표함

- 국민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,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7월 12일~27일 동안 전국 16개시도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,200명을 대상으로 1:1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, 표본오차는 $\pm 2.8\%$, 신뢰수준은 95%임. 면접조사는 갤럽에 의해 실시됨

○ 이명박 정부 출범 후, 우리 국민의 통일의식은 이중적 성격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

○ 8.15경축사에서 ‘통일은 반드시 온다’, ‘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’고 언급된 것처럼 국민의 통일의식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.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

- ‘통일이 필요하다’는 응답 59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(2008년 51.8%, 2009년 55.8%)

- ‘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’는 응답 53.5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(2008년 47.5%, 2009년 53.2%)

○ 하지만, 현실주의적 접근 태도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음.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족동질성보다는 안보나 경제적 이해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한 예측도 부정적인 관점이 늘고 있음

-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‘같은 민족이니까’ 응답이 43%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음(2008년 57.9%, 2009년 44%)

-반면에 ‘전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’는 24.1%, ‘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’는 20.7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(2008년 14.5%, 17.1%, 2009년 23.4%, 18.6%)

- ‘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’는 응답 24.8%에 불과

-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‘30년 이상’(20.8%)과 ‘불가능하다’(20.6%)로 보는 응답이 눈에 띄게 늘어남(2008년 13.8%, 13.5%, 2009년 16.5%, 19.9%)

○ 8.15경축사에서 현실적인 통일대비의 중요성 역설, 관건은 방법론임. 통일의 ‘과정’ 없는 ‘결과’를 위한 통일 준비는 무의미하며, 현실적인 통일대비 논의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과 병행되며 진행되어야 바람직함

- ‘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’는 응답이 68.6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 (2008년 57.3%, 2009년 64.2%)

- ‘정기적인 남북 대화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’는 응답이 75.3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남(2008년 64.3%, 2009년 73.7%)

○ 북한에 대한 경계심 증가, 안보 위기의식 증가한 가운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로 ‘군사적 긴장해소’(83.6%)를 꼽아 8.15경축사에서 언급된 ‘평화공동체’의 구축 역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

- 우리에게 북한은 ‘협력 대상’이라는 응답률은 낮아지고, ‘적대 대상’이라는 응답률은 높아짐. 2009년과 비교할 때, ‘협력대상’ 50.7%→44.7%, ‘적대대상’ 9%→12%

-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‘있다’ 응답률 67.3%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음(2008년 52.1%, 2009년 63.6%)

-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한 문제들로는 군사적 긴장해소(83.6%)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북한의 인권개선 (82.8%), 북한의 개방과 개혁(78.2%),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(75.7%) 순서로 나타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컸음

○ 국민 통일의식조사 결과, 현재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. 8.15경축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, 방법론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.

○ 신(新) 3단계 통일방안이나 통일세 등의 대안들에 대해 충분한 소통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

-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‘만족한다’ 39.5%, ‘불만족한다’ 60.5%

-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‘잘 반영하고 있다’ 28%, ‘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’ 72%

○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전체 결과는 9월 7일(화) 오후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발표될 예정임

《끝》